

학교폭력 불복수단 및 판례분석

김 의 성
(대전광역시교육청 변호사)

I

재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요청

학교장 조치

가해학생

전학, 퇴학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재심 청구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심청구
불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재심 없이도
별도 행정심판 가능

재심 없이는
행정심판 불가

피해학생

모든 조치

재심 청구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재심청구)

-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17조의2 ①)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조치를 받은 날 : 조치가 성립한 날
→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
-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

재심 심리 방식 및 결정통보(영24조③④⑥⑦)

- 지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해학생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17조의2 ②)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은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같다.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피해학생의 절차 참여 보장**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학교에 통보한다.**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측에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II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재심청구)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의2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 학교장의 조치,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의 재심 결정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청) 의 재심 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학교폭력 재심결과 불복절차

- 사례1 -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경우
- 사례2 -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경우
- 사례3 -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이 인용된 경우
- 사례4 -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이 인용된 경우

Ⅲ

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 국·공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재심 및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제소기간(행정소송법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반적인 처분의 위법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23조).
- (비교)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이 있어야 조치에 대한 절차가 정지된다(민사집행법제277조, 제300조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상급학교 진학 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시점이나 징계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급학교 진학 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계속)

④ 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

■ 소송당사자

- 원고 : 고등학교 1학년
- 피고 : 학교장

■ 사건내용

- 원고는 피해학생이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의자를 뒤로 빼 피해학생이 넘어지도록 함
- 피해학생은 넘어지며 꼬리뼈가 골절이 되며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음
- 원고와 피해학생은 원만히 화해하였다가 2학기 들어 급격히 관계가 악화됨.

■ 쟁점

- 원고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가?
- 원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면 징계의 수준은?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학생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학생을 바닥에 주저앉게 하려는 의도로 의자를 뒤로 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

- 이 사건 가해행위는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폭력의 심각성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회적 행위에 그쳤다.
-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깊이 반성하여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을 도운 사실이 있고, 다른 학교로 임의로 전학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의 부모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학생의 부모도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자치위원회 결정 이후의 상황)
-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받은 바 없고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학교폭력 판결 사례 1

-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타당
 - A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칙으로 B에게 아무나 골라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고, B가 장애 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면서 집단 괴롭힘으로 번짐.
 - A는 피해학생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며 가해학생과 비슷한 징계를 내린 학교 측이 부당하다 주장함.
 - 법원은 "집단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고른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학교폭력 판결 사례 2

- 신체 접촉 없이 동급생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것을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

- 초등학교 2학년 A는 지난해 같은 반 B군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전학조치를 받음.

-법원은 "A가 B를 따라 피해 여학생이 있는 칸으로 따라 들어가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본 것은 B가 행사한 학교폭력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해 학생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당했고 그 장면을 A를 지켜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의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초등1년 남녀학생 '신체 보여주기'도 학교폭력
 - 초등학교 1학년 A는 같은 반 여학생인 B를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준 뒤, B에게도 보여달라고 제안함. 이후에도 A는 B에게 또 '신체 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시도함.
 - 자치위원회는 A에 대해 서면 사과, 전문가 특별교육(2일), 접촉금지 조치를 결정함.
 - A의 부모는 B가 나이가 어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A가 B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언어폭력의 성립요건

■ 소송당사자

- 원고 : 중학교 1학년
- 피고 : 학교장

■ 사건내용

- 원고는 피해학생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 ('찐따') 등을 전송하고 따돌림 행위를 함

■ 쟁점

- 원고의 행동 중 욕설 문자 전송은 공연성이 없는 행위로서 형법 상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가?

언어폭력의 성립요건

-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정의 규정에 나열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

-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신조어
- 암시하는 발언
-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협박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OO충’이라는 표현도 학교폭력

- A는 수업시간에 같은 반 B가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놀렸다. 또 A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B를 가리켜 비슷한 표현 등을 쓰며 놀림.

- 이에 자치위원회는 ‘서면 사과’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함.

- 법원은 “학교폭력이 오랜기간 지속된 점,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폭력은 전파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설명충, 진지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A의 취소청구를 기각함.

사이버 따돌림(민사소송)

■ 소송당사자

- 원고 : 사립고등학교 3학년
- 피고 : 학교법인

■ 사건내용

- 원고는 A, B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내용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사용함.
- 원고와 사이가 멀어진 A가 피해학생에게 위 대화내용을 전달하였고 피해학생은 원고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함.

■ 쟁점

-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는?
- 원고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행정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인가?**

처분이라면 --> 사립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처분이 아니라면 -->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별 필요**
- **사립학교에서도 의무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구별 필요?**

- 소송의 진행
 - 1심에서 가해학생(사립초 2학년)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 1심 판결 : 기각 -> 가해학생 항소
 - 2심 판결 : 1심 판결 취소
- 행정소송 관할법원으로 이송

- 법원의 판단
-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 절차, 학부모가 특별교육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고려하면, ① 학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사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징계는 피고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이버 따돌림의 성립요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헐담이나 비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했던 것은 인정된다.
- 그러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등이 피해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욕설 중 상당부분은 원고가 스스로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며, 피해학생과 관련된 부분 또한 피해학생에게 직접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난이나 욕설이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해학생을 제외한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쉽사리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이버 따돌림의 성립요건

- 법원의 판단

- 다만,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그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피해학생이 이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의 요건 중 '심리적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심리적 공격 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학생은 이러한 대화를 사후에 1회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 등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지속적인 따돌림 사건

- 중학교 3학년생인 A는 같은 반 동급생 B와 말다툼을 하다 사이가 틀어짐. 그 이후로 B와 어울려 지내는 학생들이 A에 대해 공공연하게 무시하거나 헐뜯하기 시작함.
- A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눈치챈 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자 해당 반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 애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A에 대한 조롱과 헐뜯을 한 달 넘게 이어갔고, 이런 분위기에 동조해 A에게 다가가지 않는 학생도 늘어남.
- 반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A는 급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학교폭력 판결 사례 (계속)

- 자치위원회는 서면 사과, 사회봉사 5일, 특별 교육 5일 등의 조치를 내렸고, 재심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추가 징계를 이뤄짐.
- 이에 가해 학생들은 A가 먼저 친구들을 무시하고 헐뜯는 등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미 사회봉사 등을 이행했는데 추가 징계를 내리는 건 가혹하다며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단순히 A와 어울리지 않는 걸 넘어 해당 학생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거나 헐뜯었고, 이런 행동이 한 달 이상 계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 바 설령 피해 학생이 먼저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자살송 사건

■ 소송당사자

- 원고 : 중학교 2학년
- 피고 : 학교장

■ 사건내용

- 원고는 피해학생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쌓이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친구집단에서 다른 한 명을 배제라는 방식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 원고는 '자살송'을 만들어 친구들과 피해학생 근처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 쟁점

- 원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평가되는가

- 법원의 판단
 - 자살송의 경우 원고는 친구들과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부른 것이라고 하나, 기존 친구 관계에서 점점 단절되고 있다고 느끼던 피해학생으로서는 원고가 녹음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전에는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위 노래를 부를 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조치는 형사처벌과는 달리 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학교 측에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도 넓다. 원고의 행위는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하나 상대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의율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 자치위원회 구성 상의 하자
- 자치위원 제척사유 간과
- 징계처분의 사전통지
- 처분이유제시 및 불복절차 안내

재처분 의무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판례의 경향

절차의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체적 위법성 판단을 해주었으나 더 이상 실체적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 가정통신문을 통해 희망원 제출 안내하였으나 기간 내 아무도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음(X)
- 연임에 대한 추진절차도 학부모 전체회의로
- 정원 미달 등으로 무투표 위촉(X) – 반드시 위촉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자치위원
- 학급별대표자회의 ≠ 학부모대표회의
 - 예외적인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대표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고, 학년별 대표에게 학부모대표 선출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판단

- 제척 기피사유를 가 / 피해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는 없다.
- 자치위원회 당시 피해학생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담임교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담임교사를 제외하면 위원 10명 중 5명이 회의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도 존재한다.
- 전담기구 소속 교원이 자치위원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 법원의 판단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학교폭력 징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법원의 판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 ②당사자의 성명 ③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려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④의견제출 및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어느 조치를 할 것을 미리 통지할 수는 없지만,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자치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절차

-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처분의 '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추인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긴급조치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자치위원들에게 사안보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미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자치위원 중 한 명이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계속하여 지적하였음에도 교사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불가피하게 행해져야 했고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을 뿐 자치위원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추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고 최종처분 결정 절차에 나아갔으므로 위법하다

학교장 조치에 대한 실체적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교 측에 재량권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해당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장 조치에 대한 실체적 판단 기준(계속)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V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처리 절차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민사 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 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교사의 책임
 - ✓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
 - ✓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예견가능성)
 - ✓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의 주체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국·공립학교 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 ✓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

판례의 기본적 입장(97다15258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V

학교폭력 관련 분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1. 정보공개(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2행심41)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

2.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진술서 정보공개청구

- 사건개요

- 원고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서 가해학생 A를 형사고소하였는데, A 역시 원고를 맞고소하여 원고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탄원을 위하여 학교장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A의 학교폭력 가해 진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2.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진술서 정보공개청구

-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로서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2.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진술서 정보공개청구

- 법원의 판단(계속)
 - 원고의 소년보호사건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된 점, 이 사건 정보에는 가해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들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CCTV 영상의 정보공개(2012두25729)

- 사건개요

- 원고는 수년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사 정문 앞에 놓아둔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하여 수차례 훼손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청사 정문 CCTV 녹화영상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위 기간 동안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3. CCTV 영상의 정보공개(2012두25729)

- 사건개요

- 원고는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녹화물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영상 녹화물의 공개를 통한 원고의 재산권과 시위의 자유의 보호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CCTV 영상의 정보공개(2012두25729)

- 1,2심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 제14조 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바 원고가 월체어 등의 시위용품에 대한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3. CCTV 영상의 정보공개(2012두25729)

- 대법원의 판단
-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CCTV 영상의 정보공개(2012두25729)

- 대법원의 판단
-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내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년 11월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언어폭력과 '왕따' 조장 가해자로 지목된 B양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A씨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불만을 품었고, 며칠 뒤 지인을 시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소판 파주 X고 사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배포했다.

B양의 실명 대신 'O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서에는 O모양이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교사가 가벼운 처벌로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 O모양이 담배를 피우고 학생 간 이간질, 학교폭력 가해자로 비난받는데도 학교 측이 비호해 다른 학생들이 눈치만 보고 신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O모양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과 부장이 내 편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위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O모양의 부모와 학교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를 뿐"이라며 "B양의 실명을 쓰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에 B양의 교내 지위와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 O모양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만큼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한편 양측의 분쟁을 조정,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된 만큼 어떤 목적으로도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 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감사합니다.

